

[한변 성명서] 유신50년청산위원회 -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과 국민 편가르기를 향한 또 하나의 迷夢

유신50년청산위원회가 오늘 국회에서 공식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간다. 이 위원회는 박정희 정권 하에서 제정된 1천여 개의 법률을 전수조사하여 개정·폐지를 검토하며, 유신청산특별법을 제정하여 유신잔재 청산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변은 이러한 조악하고 편파적인 역사부정은 단호히 반대한다. 유신체제는 국민의 인권을 제한하고 장기집권을 초래한 자유민주주의의 분명한 퇴영이었으나, 한편으로는 당시의 안보불안과 사회혼란을 극복하고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촉진하는 시대적 조건을 만든 측면도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화의 열매도 유신시대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자라나고 성숙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국가적 선택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고 아무 불편 없이 시행되고 있는 법령들을 이제 와서 단지 박정희 정권 하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전부 손보겠다고 하는 것은 현 집권세력이 정치적으로 재미를 보아온 이른바 「역사전쟁」을 다시 도발하려는 저급한 욕망의 발로가 아닐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민주화가 된 지 한 세대가 지난 지금, 유신의 잔재가 아직도 존재하여 국회에서 무슨 위원회와 특별법을 만들어 청산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라에 해악을 끼치거나 민생을 위협하거나 선진국 진입을 막고 있을 리도 만무하다.

유신청산에 나서겠다고 한 사람들의 면면도 우리의 과거 역사를 공정하게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교훈과 치유책을 제시하리라 기대할 수 없는 좌편향 일색이어서 또 다른 국민 편 가르기나 극심한 사회갈등을 유발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현재 우리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안위에 가장 큰 위험은 사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부패, 중북 반역성이 야기한 헌법 파괴와 인권의 실종, 경제의 침몰, 안보와 외교의 파탄이고, 이것이야말로 시급히 청산해야 할 대상이 아니겠는가. 문재인 정권이 날치기 입법한 허다한 위헌법률과 눈앞의 대장동 사기극, 각종 선거부정 논란도 청산하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반세기 전 유신청산 타령인가.

역사를 제멋대로 재단하고 국민을 편갈라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려는 외눈박이 정치 칼춤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2. 1. 18.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회장 이재원